

『인권연구』 7(2): 321-331.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2): 321-331.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2.321>

[현장논단]

## 여성 농민이 경험하는 기후위기와 인권

: 김정열 비아 캠페시나 국제조정위원 인터뷰\*

정숙정\*\*

### 목차

1. 기후위기의 현실과 농업의 어려움
2. 여성 농민의 취약성과 농민의 권리
3. 농민 인권과 정부의 책무
4. 국제 사례와 농업 전환 방향,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연결

### 1. 기후위기의 현실과 농업의 어려움

농민들은 날씨가 좋거나 꺾거나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왔다. 이런 농사의 특징을 두고 농민들은 ‘하늘과 동업한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요즘은 하늘을 믿고 농사짓기가 어려워졌다. 기후위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말 “기후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다. 농

\* 이 글은 2024년 11월 14일, 경북 상주시 외서면에서 약 90분간 비아캠페시나 국제조정위원 김정열 선생님과 진행한 인터뷰를 녹취해 정리한 것이다. 김정열 선생님은 경북 상주에서 약 34년 동안 논농사와 밭농사를 해왔고 언니네 텃밭 봉강공동체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활동 등을 하면서 농생태학 운동, 토종 씨앗 지키기, 로컬푸드 운동 등 먹거리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농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사를 짓다 보니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도 더운 해나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이 극심한 날씨는 처음인 것 같다.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오신 문달님 할머니께 옛날에는 날씨가 어땠는지 여쭙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예전에도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았지만, 그래도 진짜 말세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 그런데 요즘 날씨를 보면 말세인가 싶어.” 라고 대답하셨다. 86세이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이니, 정말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날씨라는 것을 실감한다. 이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했고, 계절마다 굴곡이 있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리듬이 있었는데 지금은 24절기에 맞춰 농사를 지으려 해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절기의 리듬이 깨진 것이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이렇게 더운 11월 중순은 처음 겪는다. 오늘이 11월 14일이고 수능시험을 보는 날인데, 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고 있다. 수능 한파는 옛말이고 수능 더위라는 말까지 나온다. 요즘이 한창 김장철인데도 김장을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라서 김장배추가 밭에 그대로 있다. 문제는 이런 날씨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위뿐 아니다. 전에 없던 가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폭우와 폭설, 늦가을 태풍 같은 기후 사건이 연이어 생기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상 기후’가 아니라 ‘일상 기후’라고 표현한다.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는 상황을 한탄하는 말이다. 이런 기후 속에서 농민들은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말한다. 농민들은 이런 기후가 늘 불안하기만 하다.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체감하게 된 것은 2018년이였다. 그해 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농민들은 덥다고 일손을 놓을 수가 없다. 특히 참깨는 한여름에 수확해야 해서 폭염 속에서도 일을 쉽사리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즈음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참깨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셨다. 그해 여름은 정말 농민들이 적응하기 어

려운 더위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때부터 기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병해충 문제를 많이 느낀다. 최근 들어 병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병해충은 농작물에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 야외에서 일하다가 쯔쯔가무시증으로 입원하고 심지어 중환자실까지 실려 가는 이웃 농민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논밭에서 잠깐 쉬거나 막걸리를 마시는 일이 흔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풀 속에 어떤 해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충이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농민 건강도 위협한다.

농민들은 야외 작업을 할 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여름에도 바람막이 같은 겉옷을 챙겨 입고 작업하느라 일하기가 더욱 거북해졌다. 해충기피제 같은 것을 구해서 몸에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병해충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막심하다.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 해충 방지용 친환경 제품을 써야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작물에 병이 한 번 오면 농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병해충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노지 농사뿐 아니라 시설농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이 하우스에서 고추를 많이 키웠다. 탄저병이 하우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하우스 재배가 노지보다 낫지만, 최근에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져 노지에서 키운 고추보다 오히려 작황이 좋지 않았다. 더위 때문에 하우스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늦가을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농사일도 무척 고되다. 하우스는 원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난방

을 하는 공간이지만 더위에는 속수무책이라 농민들은 하우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그늘 하우스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하나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정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만 들어졌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이 제한적이고, 병충해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벼와 복숭아, 고추, 감자 등 4개 품목만 해당한다. 농민들에게는 절차도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할증 제도까지 있어서 자기 부담이 크다. 게다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 사정 과정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 가입을 꺼리는 농민이 많다. 특히 소규모 농민들에게는 보험 가입이 더 어려운 상황이며, 기후재해로 손해가 나도 농민이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이 잘못해서 입은 피해가 아닌데도 농민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2. 여성 농민의 취약성과 농민의 권리

소규모 농업을 기반으로 자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절기가 변화하면서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여성 농민들은 주로 밭일을 해서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고 도시민들에게도 먹거리를 공급했다. 그러나 밭이 대규모 농업처럼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주로 밭농사를 담당하는 여성농민들이 기후재난에 더 취약하다. 또 가뭄이나 폭염이 길어지면서 밭일 자체가 힘들어지고 병충해에도 더 많이 노출된다. 특히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아 쯤쯤가무시증 같은 병에도 취약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여성 농민들이 예전 방식대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면서 먹거리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여름에 심는 작물이 문제가 된다. 상주 지역에서는 당근을 보통 7월에 심는다. 올해 당근 씨앗을 한 봉지나 뿌렸는데 겨우 20개 정도만 올라왔다. 그 더위에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 가며 간신히 파종했지만, 폭염으로

인해 밭아가 거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당근 농사도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다.

특히 일부 잡곡 농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콩은 논에서도 대량 재배를 하다 보니 그나마 자급률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국산 참깨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고, 올해는 팥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녹두는 매우 귀한 잡곡이 되어 버렸다. 원래 녹두 농사는 여성 농민들, 특히 할머니들이 주로 짓는 농사로, 익으면 그때그때 따서 말려야 한다. 텃밭에 심어 두고 아침저녁으로 오며 가며 따서 말려서 모았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장마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날씨가 불규칙하다 보니 녹두가 익기도 전에 터지거나 썩이 나버려 농사가 잘되지 않고, 녹두도 귀해졌다.

더위 때문에 기존 농사가 어렵다고 하면, 열대 작물로 바꾸어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열대 과일 같은 걸 재배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농사 경험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은 농사가 6개월 정도만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농사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하고 수정하며 경험을 축적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작목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 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어, 10년을 농사짓는다고 해도 겨우 10번의 경험이 쌓이는 것이다. 농민들이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에 농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작목을 전환하려면 새로운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기계를 마련해야 하고, 기존에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 농기계는 모두 쓸모없게 된다. 그만큼 농민들이 쉽게 작목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민의 지식과 기술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농민들은 단순히 씨앗을 심고 가꾸는 수준을 넘어 종자를 육종하고 개량하는 데에도 많은 지식과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종류의 상추를 심었다가 우연히 새로운 상추 품종을 발견해 계속 키운 적이 있다.

또한 농민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올해 토종 생강과 일반 생강을 심어 비교해 보았는데, 토종 생강은 폭염 속에서도 거의 다 살아남았지만 일반 생강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토종 종자가 얼마나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농민들은 자신만의 기술과 지혜로 농사를 짓는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이하,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해 온 종자와 전통지식을 유지, 관리, 보호,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 국가는 농민종자 체계를 지원하고, 농민종자 사용과 농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종 종자는 기후위기와 병충해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토종 씨앗은 생명력이 강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한다. 토종 씨앗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육종하기 위해서라도 원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근 같은 작물은 더위에 취약한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위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원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업화된 씨앗이 병충해로 모두 멸종되는 상황에서 토종 씨앗이 없다면 우리의 먹거리 기반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바나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나나가 거의 단일 품종으로 재배되다 보니, 파나마병 같은 질병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토종 농사는 씨앗이 사라지지 않도록 매해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으며 작물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해 이어가야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 지금은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종자를 지키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종자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체계는 미비하다. 일부 광역지자체에는 토종 종자 지원 조례가 있고 경북에도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 무실하다. 반면 경남이나 제주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종 농사를 지으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농업과 먹거리 체계에서 토종 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농민들로부터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그 종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유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3. 농민 인권과 정부의 책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농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특히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보면 농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우리 지역도 가뭄 대책이 거의 없다. 밭농사를 짓는 데 물을 공급하려면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샘 하나 파는 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들어 소규모 농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기후위기 대응 자금이 책정되었지만, 정작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농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농업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여전히 스마트팜 같은 기술 중심의 대응 방식에만 치우쳐 있다. 스마트팜은 단순한 논리에 기반한 대책인데, 노지에서 농사가 어렵다면 스마트팜에서 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전력이나 화학 물질이 초래하는 환경적, 생태적 비용은 간과되고 있다.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폐수와 화학 물질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녹조 현상을 악화시키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스마트팜은 결국 화학 물질로 작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토양과 미생물의 생명력을 활용하는 친환경 농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이다. 스마트팜이 몇 가지 과채류를 포함한 일부 먹거리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소규모 농민들이 키우는 잡곡이나 다양한 품종이 사라지면 우리의 먹거리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친환경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농업 방식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본다는 것은 책임의 주체를 묻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한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농업과 먹거리 체계도 책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 중 하나는 억만장자들의 우주 비행에 관한 것이다. 미국 억만장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우주 관광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주 여행 한 번에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0억 명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같다고도 한다. 이렇게 최상위 부유층이 탄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반면 가난한 농민들은 막대한 농작물 손실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1개 대기업이 전체 온실가스의 64%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 탄소 배출 기업이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민들의 장바구니 운동이나 쓰레기 줍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먹거리 체계 전환을 기조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스마트팜 중심 농정은 기후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제시하며 대규모 기업형 농업을 밀어주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산업화된 농업 방식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농민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탈농으로 내몰리게 된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여성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거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탈농 이후에는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농업노동자로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 서유럽으로 이주한 이들은 불법 노동자로 취급받으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기후 난민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농업 노동자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논에서 피를 뺐는 일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너무 더운 날씨였지만 쉬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모습이다.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작업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폭염이나 폭우를 피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스마트팜에서도 농약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미등록 노동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농업 노동자들을 농민으로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국가가 기후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 취약층을 보호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탄소세료를 위해 먹거리 체계를 바꾸어나가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태적인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토착농민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여성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태적 농업 방식을 지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 4. 국제 사례와 농업 전환 방향,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연결

유럽에서는 비아 캠페시나 같은 소농 농민 조직과 정부 간의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아 캠페시나 활동을 하면서 외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정책 방향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상 깊게 보았다. 브라질의 MST(무토지 농민 운동)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이 조직은 생태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로컬푸드 매장까지 연계한 체계

를 갖추고 있다. 최근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소농과 원주민 농업 방식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되고 있어 더욱 활발하게 대안을 만들고 있다.

남미에는 농생태학 학교가 여러 개 운영되고 있다. 현재 12개 정도가 운영 중인데, 농민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연구와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의 ‘아나무리 농생태학 학교’는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도시 사람들과 교류하며 농생태학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특히 우리 상주 지역에도 이러한 농생태학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여전히 산업화된 농업 방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는 빌 게이츠 재단 등에서 화학비료, GMO 종자, 농약을 지원하며 농업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에 대해 케냐에서는 GMO 종자 합법화에 반대하며 농민들이 싸우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를 완화하면서 먹거리 주권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한 생태적 농업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토종 종자와 지역 먹거리 체계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농민,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고, 전통 지식 및 토종 종자 보존을 강화하는 농생태학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소규모 농민들이 생태적인 농사를 통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농업의 가치나 먹거리, 농촌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땅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의 맛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기술 중심의 해결책만을 추구하다 보니 먹거리와 자연의 관계를 잊어가고 있다. 농업의 생태적 전환과 시민 교육을 통해 농촌, 농업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와보고, 농민들과 직접 만나며 교류하는 경험

이 중요하다. 이런 만남과 교류를 통해 농촌과 도시의 관계를 회복하고, 농업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과 먹거리의 전환은 기후 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농업과 먹거리를 어떻게 전환해낼지가 기후운동의 진전을 좌우할 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는 어떠한가, 농민은 어떠한 대안을 제안하는지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기후운동 진영에서는 농민들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 여성 농민들이 기후 정의 운동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농업과 먹거리가 기후위기의 근본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기후 정의 운동에 있어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